

## 지리적 적절성을 기반으로 한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전라남북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나형\*·주향아·김주성·손동욱\*\*·손현정\*\*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HK사업단·홍익대 도시공학과)

### Abstract

Kong Na-hyung, Ju Hyang-a, Gim Joo-sung, Sohn Dong-wook and Son Hyun-jung. 2013. Study 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for foreign migrant workers based on the accessibility to the educational facilitie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n* 21(3).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of Korean linguistics as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foreign migrant workers. Particularly, we look into Korean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to find out how foreign migrant workers can learn Korean language more effectively. In order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foreign migrant workers, we adopt linguistic typological methods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Using GIS, we present the spread of the foreign migrant workers population and educational facilities enforcing the KIIP program. We also show some possibilities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foreign migrant workers such as the flexibility of class schedules, revision of textbooks and compensation of government. (112 words)

**Keywords:** linguistic typology, Korean language education, Geographpic Information System(GIS), Korean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Foreign migrant workers

---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입(NRF-2009-361-A00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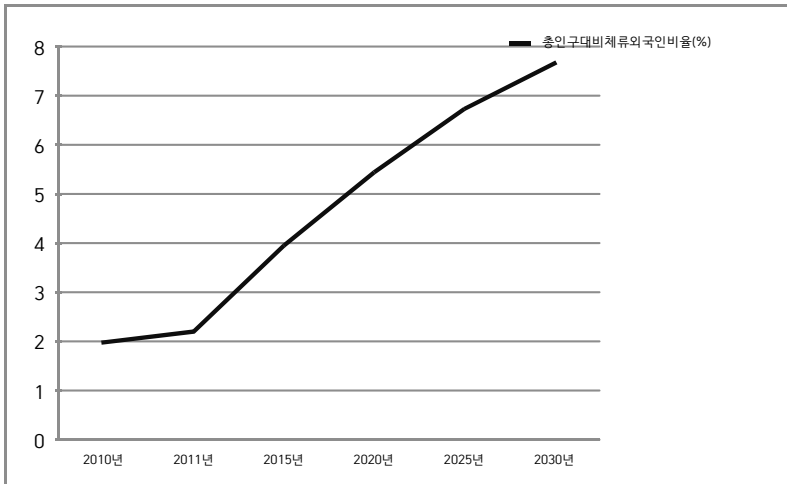
\* 주저자: 공나형

\*\* 공동저자: 주향아, 김주성, 손동욱

\*\* 교신저자: 손현정

## 1. 들어가기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 중 이주 노동자 집단은 결혼 이주자 집단에 비해 많은 부분 소외되어 왔다. 한국어 교육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과제로 대두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 수준은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또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그 대부분이 민간단체의 몫으로 남겨져 교육의 수요에 비해 공급의 효율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해 법무부가 발표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도 드러났듯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추세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여러 분야에서 외국 인력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임에 분명하다. 아래의 그림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의 총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장기 체류 외국인 숫자는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수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는 다른 체류 목적의 외국인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의 외국 인력 의존도는 가속화될 것이며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총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예상 목표(법무부 2011)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144만 명을 성격별로 분류할 때, 취업 목적의 비자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는 55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sup>1)</sup> 상황이 이러하다면 그들의 수요에 비례하여 사회 제반의 제도 및 시설이 갖추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언어 교육은 이주자가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주자들에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화를 배운다는 의미를 넘어서 생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시설과 제도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마저도 체계적으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학습 단계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학습 단계는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입국 전과 후, 그리고 취업 중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입국 전 단계는 한국어 능력 시험(EPS-TOPIK)의 준비단계이고, 시험을 통과하고 입국한 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제노동협력원이 주관하는 취업 교육을 받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취업 중 단계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선택적이고 개별적으로 외국인력지원센터나 여러 민간 단체를 통해 다양하게 행해지게 된다. 결국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어를 ‘집합적이고 필수적’으로 학습할 기회는 입국 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교육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취업하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실시되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실제적인 언어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한국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취업 중에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1) 2011년 12월 기준으로 고용허가제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체류 외국인은 전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의 구성 중 90%를 차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immigration.go.kr>) 참조.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언어지리학적(linguistic topology) 방식<sup>2)</sup>으로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시별 산업 단지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sup>3)</sup>의 분포를 비교하여 교육 기관의 위치 선정의 사회지리적 적절성을 살펴보기로 한다.<sup>4)</sup> 대다수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 단지 주변에 거주한다고 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기관과 산업 단지 사이의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시한 여러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므로 지리적 접근성까지 고려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 타국에서 불러온 인력을 위한 교육은 최소한 그들의 편의를 고려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교통편이 불편한 지방에서의 교육은 지리적인 접근이 더욱 용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포섭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기관의 사회지리적 분포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주로 이주 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정책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고 평가한다. 3장에서는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체계와 현황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전라북도 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의 사회지리적 분포에 대한 공간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5장에서는 이제까지 분석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 2)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언어지학적 언어 분석 방식의 유용함은 김하수 외(2012)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3) 본래 이주민 대상 교육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과,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하나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교육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외국인력지원센터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 지역인 전라남북도에는 외국인력지원센터가 두 곳뿐이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아 이 기관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시행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주민 전체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주된 한국어 교육 정책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 4) 비슷한 맥락에서 2011년 법무부에서 발간된 '사회통합프로그램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태 및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이민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자들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 프로그램 시행 기관의 지리적 접근이 쉬워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 II.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 교육의 대상자 가운데 이주 노동자에 집중한 연구는 결혼 이민자라든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이주 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라 하더라도 정책 연구는 교육과정이나 교재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주와 노동자 문제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속성을 강하게 지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직결되는 사회적 차원의 정책 연구가 드물다는 것은 반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언어 정책은 충분히 축적된 현실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되고 제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자료의 유형 가운데 간과되어 온 것으로 공간 자료가 있다. 지금까지 현실 자료에 기초한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들은 대체로 자료를 글말로 제시하거나 도표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언어 교육은 구체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관련 정보들이 공간 자료인 지도에 반영되어 직관적으로 제시된다면, 정책 분석과 제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로 이용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분야로는 언어적 소외 계층에 대한 연구,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언어지학적 연구 등이 있다. 먼저, 언어적 소외 계층에 대한 논의에서, 소외 계층이라는 말은 소수자(minority) 개념으로 이어진다. 언어적 소수자란 일정한 곳에 모여 살면서 해당 사회의 지배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언어적 소수자 또는 소외 계층에 대한 문제는 2006년 국립국어원의 『새국어생활』 16권 1호에서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의 두드러진 언어 소외 계층으로 결혼 이주 여성, 새터민, 장애인과 더불어 이주 노동자가 제시되었는데, 본고와 관련해서는 특히 윤인진(2006)과 조선경(2006)이 이주 노동자가 모여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 점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이들이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소외되었음을 비판하고, 교재, 교육과정, 교사, 제도화 등에 대한 특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황진(2010)). 조항록(2008)의 경우, 이주 노동자가 한국어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모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로 김재욱(2011)은 학습자, 교육과정, 교수법, 교사, 교재, 교육 일정 등의 측면에서 문제를 다루었다. 박혜숙

(2012)과 조항록(2012)은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이 정부 차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운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포섭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적이고 교육 내용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는 데에 그쳤다. 물론, 윤인진(2006), 조선경(2006), 조항록(2008) 등에서 한국어 교육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며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역시 구체적인 사례 분석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본고는 김하수 외(2012)에 이어 지지학적 정보가 언어 정책 결정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주 노동자를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어지식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현장에 대한 정밀한 자료를 구축함과 동시에, 효용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Ⅲ.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2012년 1월 26일 공포, 2012년 12월 27일 시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및 제21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등에 근거를 두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주관부')가 주관하는 이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육·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조항록 2013: 253). 참여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지는 국내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 기관에서 실시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귀화 필기 시험과 면접 심사가 면제되며, 국적 취득 시 심사 대기 기간이 단축되고,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 거주 자격(F-2) 변경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일반 영주 자격(F-5-1)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점수가 면제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특정 활동(E-7) 변경 시 한국어 능력 입증이 면제되며, 장기 체류 외국인의 거주(F-2) 자격 변경 시 한국어 능력 입증이 면제된다. 덧붙여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 자격(F-5-1)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점수가 면제되고, 일반 귀화 대상자 동포의 영주 자격(F-5) 취득 시 한국어 능력 입증이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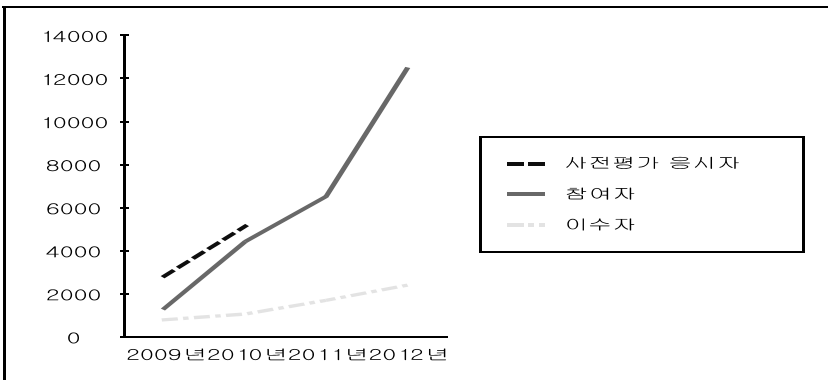
교육과정은 아래 <표 1>과 같이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로 나뉘며 한국어는

기초 과정을 포함하여 총 415시간, 한국 사회의 이해는 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이다.

〈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과정 및 이수 시간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한국어					한국 사회 이해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모든 교육 시작 전에는 본부의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사전 평가가 행해진다. 다만 0단계부터 참여하기 희망하는 참여자는 면제되며, 사전 평가에서는 한국어 능력 등 기본 소양 정도를 평가한다. 이후 한국어 초급 1, 초급 2, 중급 1 해당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해 각 단계 종료 후 단계 평가가 행해진다. 60점 이상은 이후 단계로 승급이 가능하며, 불합격자는 동일 단계를 재수강하게 된다. 한국어 최종 단계인 4단계까지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중간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6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사무소장 명의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KIIP-KLT)’ 합격증을 발급 받게 된다. 한국 사회 이해 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 과정의 전반에 관한 평가인 종합 평가를 응시하게 된다. 60점 이상의 합격자에 한하여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합격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 발급된다.



[그림 3]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변화 추이(법무부 2011)

5)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http://www.kiip.kr>) 참조.

[그림 3]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전 평가 응시자와 참여자, 이수자 수 모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6)</sup> 먼저 사전 평가 응시자의 경우 2009년 2,827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5,140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수를 보면 2009년 1,331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4,427명으로, 2011년에는 6,519명을 거쳐 2012년에는 12,444명으로 약 10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수자의 수 역시 2009년 797명에서 2010년에는 1,063명으로, 2011년에는 1,699명을 거쳐 2012년에는 2,399명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완료자 수를 체류 자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체류 자격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완료자 현황(법무부 2011)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5,898	797	1,063	1,699	2,339
결혼이민(F-6)	4,997	697	932	1,517	1,851
방문동거(F-1)	292	41	67	65	119
방문취업(H-2)	119	21	14	20	64
영 주(F-5)	72	22	18	11	21
유 학(D-2)	77	1	5	17	54
기업투자(D-8)	54	3	1	6	44
비전문취업(E-9)	7	-	-	2	5
기타	280	12	26	61	181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전문 취업(E-9)이나 방문 취업(H-2) 등의 비자를 받고 입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이수 완료자 5,898명 가운데 이주 노동자 126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시설이 대부분 민간단체의 몫으로 돌아가 통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도 국가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을 이수하려는 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sup>7)</sup> 조항록(2011)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주민의

6) 사전평가 응시자의 경우 자료 검색의 한계로 법무부(2011)에 실린 자료만을 참고하다보니 2010년 이후의 자료는 표에 구현할 수 없었다.

7) 한편, 김재욱(2012: 74)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주도하는 단체는 민간 단체이며, 그 숫자는 전국적으로 약 150여 개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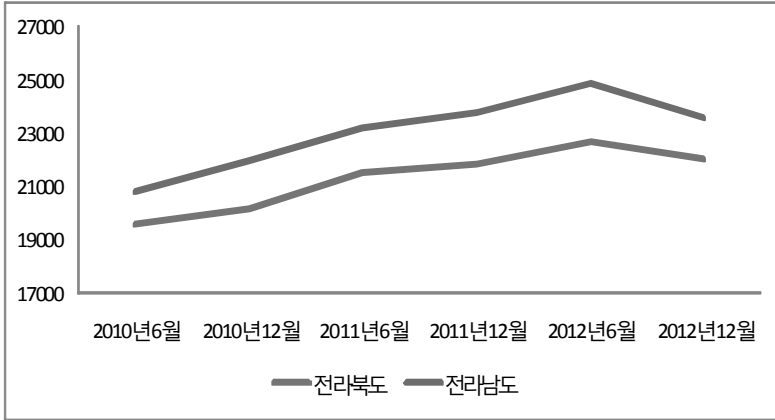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안정적인 운영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으나, 이는 전체 이민자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체류 자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참가자의 수적 증가만으로 내린 결론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할당되는 예산과 시행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온전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정부 차원의 유일하고 실제적인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진단과 처방이 촉구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 선정과 관련된 사회지리적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다.

#### IV. 전라남북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의 지리적 분포 분석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은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이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검토된 바가 없다.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 기관에 접근할 수가 없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의 접근성에 대한 분석은 해당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여러 지역 가운데 전라남북도에서 위치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고, 이들 기관의 분포 현황과 이주 노동자들의 거주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지리적 공간 분석을 수행한다.

전라남북도는 넓은 면적(남한 총 면적의 약 20%)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업지대가 발달하고 있어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라남북도 등록 외국인의 증가 추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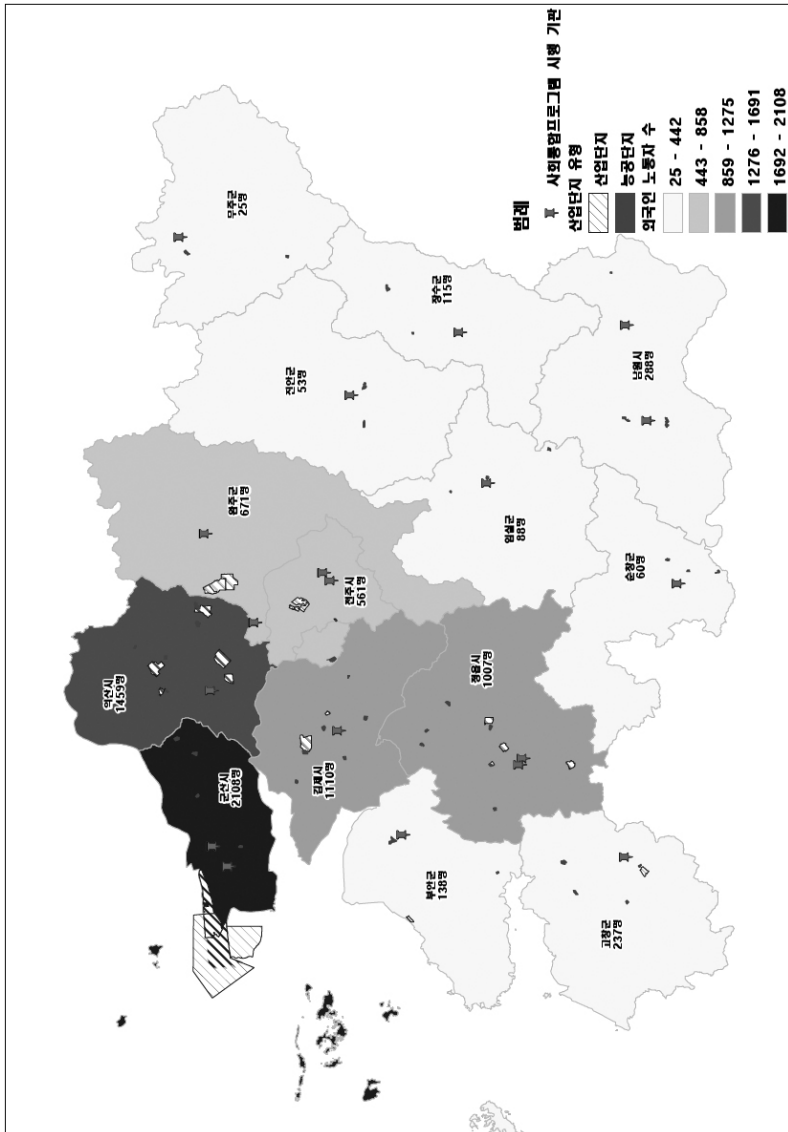
[그림 4] 2010년 6월~2012년 12월 전라남북도 등록 외국인 증가 추이

[그림 4]를 보면 불과 2년 동안 전라남북도의 등록 외국인이 각각 약 3,000여 명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 6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등록 외국인 수의 감소 현상이 보이는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의 증가 추이로 볼 때 이 지역으로의 외국인의 유입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라남북도를 하나의 예로 삼아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유입에 발맞추어 이주 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현행 이주 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라남북도의 여러 지역 가운데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산업 단지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산업 단지 주변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거주지 분포가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주 노동자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기관이 적절히 자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전라북도: 군산, 익산

전라북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이 총 20개(거점 2개, 일반 18개)<sup>8)</sup>가 있다. 아래의 [그림 5]는 전라북도의 산업 단지 및 이주 노동자의 분포 현황과 함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5] 전라북도의 산업 단지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 분포 현황

8)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http://www.kiip.kr>) 참조



군산에는 군장 국가 산업 단지, 군산 국가 산업 단지, 군산 일반 산업 단지가 인접하여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군산과 익산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약 3,500명이다. 그러나 군산과 익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세 곳뿐이다. 단순히 수적인 문제만 놓고 보아도 이 세 곳에서 아무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군산과 익산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군산에 있는 두 곳의 교육 기관은 각각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그림 6에서 ②)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그림 6에서 ①)인데, 후자의 경우는 시행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전화 조사 결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산업 단지와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결혼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주로 실시하는 기관이다.

익산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거점기관으로 군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기관을 포섭하는 원광대학교(그림 6에서 ③)이다. 그러나 이곳 역시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서 협력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의 수강 현황은 군산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지리적, 시간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대학 기관에서 교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군산, 익산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의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현황(2013년 9월 기준)

이름	교육 참여 이주 노동자 수	비고
①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없음	KIIP 등록 기관이나 운영 안 함
②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약간 명 청강	이주 노동자 위주 강의 없음
③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명	

〈표 3〉은 군산과 익산에 위치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 기관 세 곳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는 공문과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하였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군산과 익산의 이주 노동자 대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인력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민간 단체를 제외한다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공적 경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교육 기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수에 비례하게 세워져야 하며 가급적 그들의 거주지나 근무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이다. 전주나 정읍의 경우 이주 노동자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이 각각 두 곳이나 되지만, 이 두 곳은 서로 지나치게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한편, 군산과 익산의 경우 이 두 지역은 산업 단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넓고, 산재되어 분포한다. 또한 체류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수가 적고, 그마저도 산업 단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서 교육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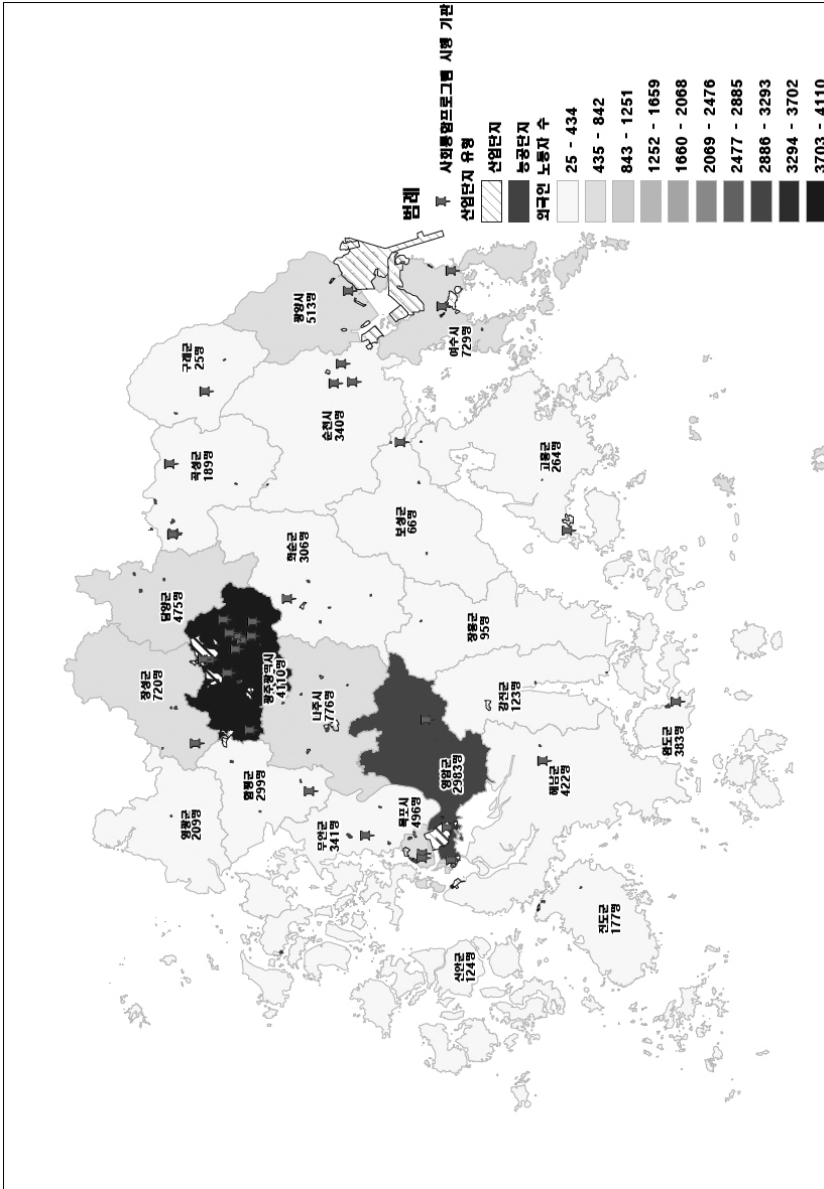
특히 익산은 군산에 위치한 국제 항구와 가깝고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 등 수송의 편의를 지니고 풍부한 노동력과 공업용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해 1970년대 이래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산업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9)</sup> 현재에도 익산은 전라북도 내에서 군산에 이어 공장 용지가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며<sup>10)</sup> 고용허가제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자격의 체류 외국인이 전라북도 내에서 군산에 이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익산에 유입될 이주 노동자의 증가율도 더욱 가속화되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당 지역에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을 보충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 2. 전라남도: 광양, 여수, 목포, 영암

전라남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은 총 35곳이고, 전라남도에 산업 단지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곳을 꼽자면 광양, 여수, 목포, 영암을 들 수 있다. 전라남도의 이주 노동자 분포 현황과 산업 단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시행 기관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9)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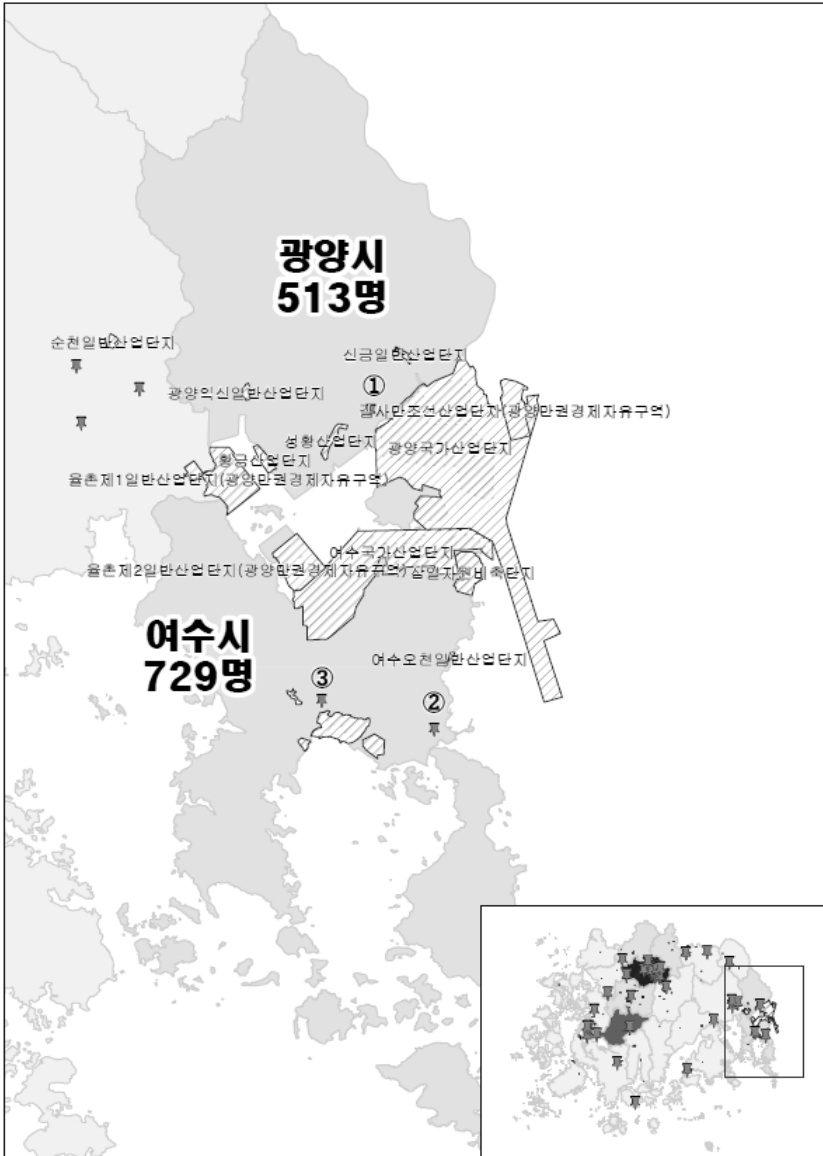
10)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ejeonbuk.net>) 참조.



[그림 7] 전라남도의 산업 단지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 분포 현황

[그림 7]은 [그림 5]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수를 숫자로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수의 많고 적음을 색의 명암으로 나타냈다. 이주 노동자 수를 나눌 때 한 구간을 전라북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약 400명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총 10개의 구간으로 이주 노동자 수를 표현하였다. 산업 단지와 농공 단지도 표현되어 있으며, 한국어 교육 기관의 위치가 핀 모양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도를 보았을 때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광주광역시임을 알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광주광역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행 기관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의 수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의 수가 비례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도를 분석해 보았을 때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는 곳은 광양과 여수, 목포와 영암이다.





[그림 8] 광양, 여수의 산업 단지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 분포 현황

[그림 8]은 광양과 여수의 산업 단지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 분포 현황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곳에는 광양 국가 산업 단지와 여수 국가 산업 단지가 크게 자리하고 있고, 그밖에 다양한 규모의 산업 단지들이 산재해 있다. 두 지역의 이주 노동자 수를 합하면 약 1,200여 명이 된다. 그러나 광양과 여수 전체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 한국어 교육 기관은 세 곳뿐이다. 한 곳은 지리적으로 광양 국가 산업 단지과 인접해 있어 이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하지만, 이곳은 광양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그림 8]에서 ①)로 주로 결혼 이민자의 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여수의 두 개 교육 기관은 각각 여수다문화복지원([그림 8]에서 ②)과 쌍봉종합사회복지관([그림 8]에서 ③)이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은 여수 국가 산업 단지과 인접하고 있으나 여수다문화복지원은 산업 단지과 거리상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을 전후로 하여 교육을 받으러 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1,200여명의 이주 노동자를 세 곳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등, 교육 기관이 수적으로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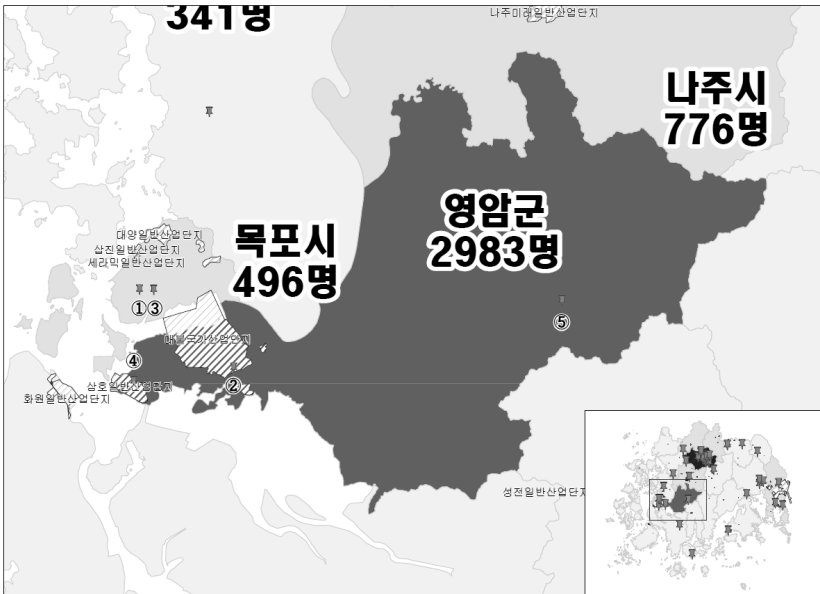
〈표 4〉 광양, 여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의 교육 현황(2013년 7월 기준)

이름	교육 참여 이주 노동자 수	비고
①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없음	이주 노동자 위주 강의 없음
② 여수 다문화복지원		
③ 여수 쌍봉종합사회복지관		

〈표 4〉는 광양과 여수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광양과 여수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현황은 공문과 전화 질의로 조사되었고 면담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세 곳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이주 노동자 대상 강의 자체가 없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sup>11)</sup>

11) 여수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인 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가 한 곳 있으나 1개 기관으로 여수 광양 지역의 이주 노동자를 포섭하는 것이 역부족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본고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광양은 1970년대 광양제철소의 준공으로 전통적인 농·수산업 지역에서 제조업의 도시로 변모한 곳으로, 철강 산업의 쇠퇴로 다소 부침의 위기는 있었으나 여전히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제조업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지정학적인 위치상 해양 교류에 탁월한 이점이 있어서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매우 활발한 도시에 속한다. 이러한 산업과 무역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광양은 타국과의 교류가 증시됨에 따라 더욱 발전 가능성 있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다면 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좀 더 활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9] 목포, 영암의 산업 단지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 분포 현황

[그림 9]는 목포와 영암의 산업 단지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 분포 현황을 확대하여 나타냈다. 전라남도에서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영암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불 국가 산업 단지가 있어서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이 상당하다.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총 2,983명의 이주 노동자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외국인력지원센터는 논외로 한다.

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접해 있는 목포시까지 고려하면 이주 노동자 수는 약 3,500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목포, 영암을 통틀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은 다섯 곳에 불과하다. 또한 목포시에 위치한 두 곳은 거리 상 인접해 있어서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기에 지리적으로 부적절하다. 영암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인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그림 9의 ⑤)은 산업 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육을 받으러 가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다.

〈표 5〉 목포, 영암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의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현황(2013년 7월 기준)

이름	교육 참여 이주 노동자 수	비고
①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20여 명	자세한 정보 공개 안 함
② 목포영암 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	50여 명	연 2회 실시, 주말 반 위주
③ 목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없음	이주 노동자 위주 강의 없음
④ 영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⑤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		

〈표 5〉는 목포와 영암에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 다섯 곳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목포와 영암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현황도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공문과 전화 질의를 통해 조사하였다. 앞서 살펴본 지역의 교육 기관들은 참여 이주 노동자 수가 거의 없었던 반면, 목포의 두 기관(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과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에서는 참여 이주 노동자 수가 약 70여명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목포영암 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그림 9에서 ②)의 경우 주말반 위주의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세 곳은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강의가 전혀 없고,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위주여서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어 교육의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목포의 두 곳에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목포와 영암에 있는 외국인 수를 고려해 보았을 때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은 전체 외국인 수의 약 5%에 불과한 매우 적은 수이다. 이를 통해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적인 부족함이나 지리적 부적절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령 나주시의 경우 이주 노동자가 776명 거주하고 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반면 순천시나 곡성군의 경우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가 각각 340명, 189명으로 나주시보다 적은 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한국어 교육 기관은 각각 세 곳과 두 곳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행을 허가해 주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새로운 교육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주 노동자를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주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V. 이주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제안

앞에서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의 입지 조건이 이주 노동자들의 분포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 기관이 위치하더라도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곳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많은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 노동자 지원에 특화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자체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기관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므로, 두 정책 부서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소외될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국적이나 특정 신분 취득 등 사회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은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 이주 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어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을 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주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별히 사용자 편의를 고려

한 정책 입안과 시행의 자세가 필수적이다.<sup>12)</sup> 본고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을 선정할 때 이주 노동자의 거주지를 고려한 입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전라남북도의 사례를 통해 수천 명이 되는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해야 할 시행 기관이 단 몇 군데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 이주 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교육이 가능한 시설인지의 조건만을 가지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으로 허가를 내 주는 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이주 노동자의 거주지와 근무지를 먼저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위치에 시행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기관의 선정 기준을 보면 지리적 위치 선정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sup>13)</sup>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 수행에 있어 접근성의 문제는 교육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기관 선정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장소를 이주민들의 거주지나 근무지 부근에서 찾을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체와 한국어 교육 기관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부처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체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이주 노동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국어 교육의 기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파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평일 일과 시간에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나 여건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평일에 일을 하지 않고 한국어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사업체마다 일주일에 1회나 2회 정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 파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2) 이러한 점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와 인식을 세밀하게 조사한 조선경(2006)의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3)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관 지정 기준은 교육과정 개설 및 인력, 교육시설 환경, 교육시설 안전, 교육시설 운영에 대한 것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이들 기준에 지정학적 위치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사업장 관리자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 교육의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된다면 사업장에서도 이들을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것이며, 작업 효율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 관리자들에게는 앞으로의 사업장 환경 관리를 위해서도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 내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 성도가 우수할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장에 적절한 보상을 주는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 혹은 주말 등으로 교육 시간을 확충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운다면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이 가능한 시간에 프로그램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표 3, 4,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 대상 기관의 경우, 주말 반 수업을 지원하는 곳은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 한 곳에 불과했다. 이주 노동자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다면 다른 시행 기관에서도 수업 시간을 주말 등으로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이 각기 다른 산업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획일적인 커리큘럼을 전 지역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감안한 커리큘럼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것은 이주 노동자들의 사업장 내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쓰이는 여러 용어나 장비 사용법 등을 숙지해야만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각 교육 기관마다 특화된 커리큘럼을 보충한다면 이주 노동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소외 실태는 일차적으로 대부분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이 노동자에게 집중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력지원센터와 같은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전라남북도에는 현재 2곳의 외국인력지원센터(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가 있으며,<sup>14)</sup> 그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목포·영암 지역 한 곳뿐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체류 외국인의 절반

14) 한국산업입력공단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 참조.

을 차지하는 이주 노동자를 정책 대상으로 명백하게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소의를 초래한 행정 체계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반성과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주 노동자에게 맞추어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 VI. 나가기

한국에서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언어교육이 다른 외국인 집단에 대한 언어교육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언어지식학적 방식으로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다시 말해, 지리적 공간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정보들을 각각의 지도에 반영하고, 이 지도들을 포괄으로써 드러나는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언어 문제에 대한 입체적 진단과 처방을 시도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전라남북도 주요 도시들의 산업, 이주 노동자 인구와 같은 사회지리적 성격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의 지리적 분포에 집중하여 교육 기관의 지리적 적절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기관은 이주 노동자들이 교육 받기에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지역의 산업적, 인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효율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편, 여기에서는 시도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언어지식학적 작업들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지도화를 통해 분석될 수 있는 사회지리적 정보에는 본고에서 다루었던 산업, 인구수, 위치 등의 정보 말고도 다음과 같은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분야의 정보들이 거론될 수 있다.<sup>15)</sup>

첫째, 지역 경제 정보를 더 자세하게 지도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 단지라는 큰 틀에서 지역의 경제 구조를 분석하였지만, 분석 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지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라남북도의 많은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경제의 특징을 보이고, 군산과 같은 곳은 도시와 어촌, 농촌의 경제 구조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지리적 정보를 변별적으로 지도화하면 수도권과 이 지역들을 뚜렷이 구별해 낼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수도권에 맞추어 설계된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

15) 지역의 사회지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원광대학교와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자 분들과의 현장 인터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감사를 표한다.



될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군산과 같이 복합적 산업 구조를 보이는 지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농협과 같은 기관들에서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둘째, 행정 체계의 구조를 지도화할 수 있다. 앞서 거론하였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상당수는 법무부나 이주 노동자와 크게 관련이 없는 여성가족부 소속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행정 체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주 노동자 교육의 포섭을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어디에 소속된 기관이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의 상위 기관을 정리하고, 공간분석을 통하여 기관 사이의 관계 지도를 사슬망으로 그려 낸다면, 이주 노동자의 언어교육이 소외되는 지점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셋째, 종교 정보를 지도화할 수 있다. 군산과 익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종교적인 특성이 강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원불교의 중심지이고, 통일교를 매개로 입국한 외국인들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교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군산과 같은 경우 이주 노동자 공동체가 특정 교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종교 특성을 사회지리적 정보로 담아낸다면, 이들 종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한국어 교육도 시각적 자료를 토대로 제안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주민의 학력 및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정보들도 더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역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직 이주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학업 역량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의 성별 비율을 파악하여 성별에 따른 적정 비율의 분반 수업을 제안할 수도 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은 남성 이주 노동자가 있어도 결혼 여성 이민자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도화할 수 있는 사회지리적 정보는 이상에서 제안한 것 말고도 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시각 자료인 지도를 통하여 정리되고 구현될 때, 언어 문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 및 처방이 더욱 직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쉽게도 이 글에서는 앞서 제안한 언어지리적 작업들을 지도화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하나의 방법론적, 이론적 틀을 개발하는 데에 동원되어야 더욱 의미 있는 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와 자료화를 통하여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언어지리학이 방언 문제를 뛰어넘어 유용한 언어 정보와 체계적 이론을 생산해 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재욱 (2011). “귀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언어와 문화 7(2), 125-145.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재욱 (2012).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정책에 대한 소고.” 새국어생활 22(3), 67-81. 국립국어원.
- 김하수·김승국·왕한석·김석향·윤인진·조선경·김문오 (2006). “소의 계층의 언어 실태와 그에 대한 바람직한 언어 정책 <좌담>.” 새국어생활 16(1), 101-121. 국립국어원.
- 김하수·주향아·공나형·손현정 (2012). “지리정보시스템과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의 결합.” 사회언어학 20(2), 185-211.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혜숙 (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개선 방안.” 인문학연구 44, 263-310.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윤인진 (2006).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정책.” 새국어생활 16(1), 83-100. 국립국어원.
- 정기선 (2011).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 방향 연구. 법무부.
- 조선경 (2006).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문제와 대응 방안.” 새국어생활 16(1), 7-32. 국립국어원.
- 조향록 (2008).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과제.” 사회언어학 16(1), 299-316. 한국사회언어학회.
- 조향록 (2011). 사회통합프로그램 발전 방안 연구. 법무부.
- 조향록 (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의 확대 실시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50, 235-267. 이중언어학회.
- 조향록 (2013).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 실제와 개선 방안.” 한국어교육 24(1), 237-26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황진 (2010).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Rubenstein, J. (2010). *The Cultural Landscape: An Introduction to Human Geography*. Pearson Prentice Hall.
- Romaine, S. (2000). *Language in Society: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真田信治 (1997/2010). 改訂版 社会言語学図集. 東京: くろしお出版.
- 真田信治 (2006). 社会言語学の展望. 東京: 秋山書店.

광양시청 (2013). [www.gwangyang.go.kr](http://www.gwangyang.go.kr)에서 2013년 7월에 검색했음.  
사회통합프로그램 (2013). <http://www.kiip.kr>에서 2013년 7월에 검색했음.  
익산시청 (2013). [www.iksan.go.kr](http://www.iksan.go.kr)에서 2013년 7월에 검색했음.  
전라북도 (2013). <http://www.ejeonbuk.net>에서 2013년 7월에 검색했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http://immigration.go.kr>에서 2013년 7월에 검색했음.  
한국산언입력공단 고용허가제 (2013). <http://eps.hrdkorea.or.kr>에서 2013년 12월 5일에 검색했음.

공나형  
primenh@naver.com

주향아  
arhapsody@naver.com

김주성  
the-bridge@hanmail.net

손동욱  
sohndw@gmail.com

손현정  
hyunjson@yonsei.ac.kr

논문 접수일: 10월 15일  
논문 심사일: 11월 1일~30일  
게재 확정일: 12월 10일